발달장애인 교육과정 운영 필요 경비 지원 의무화

민주 한병도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지난 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인 탓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되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정 총리, 대정부질문서 "이스타 실직자들에 실업교육 등 최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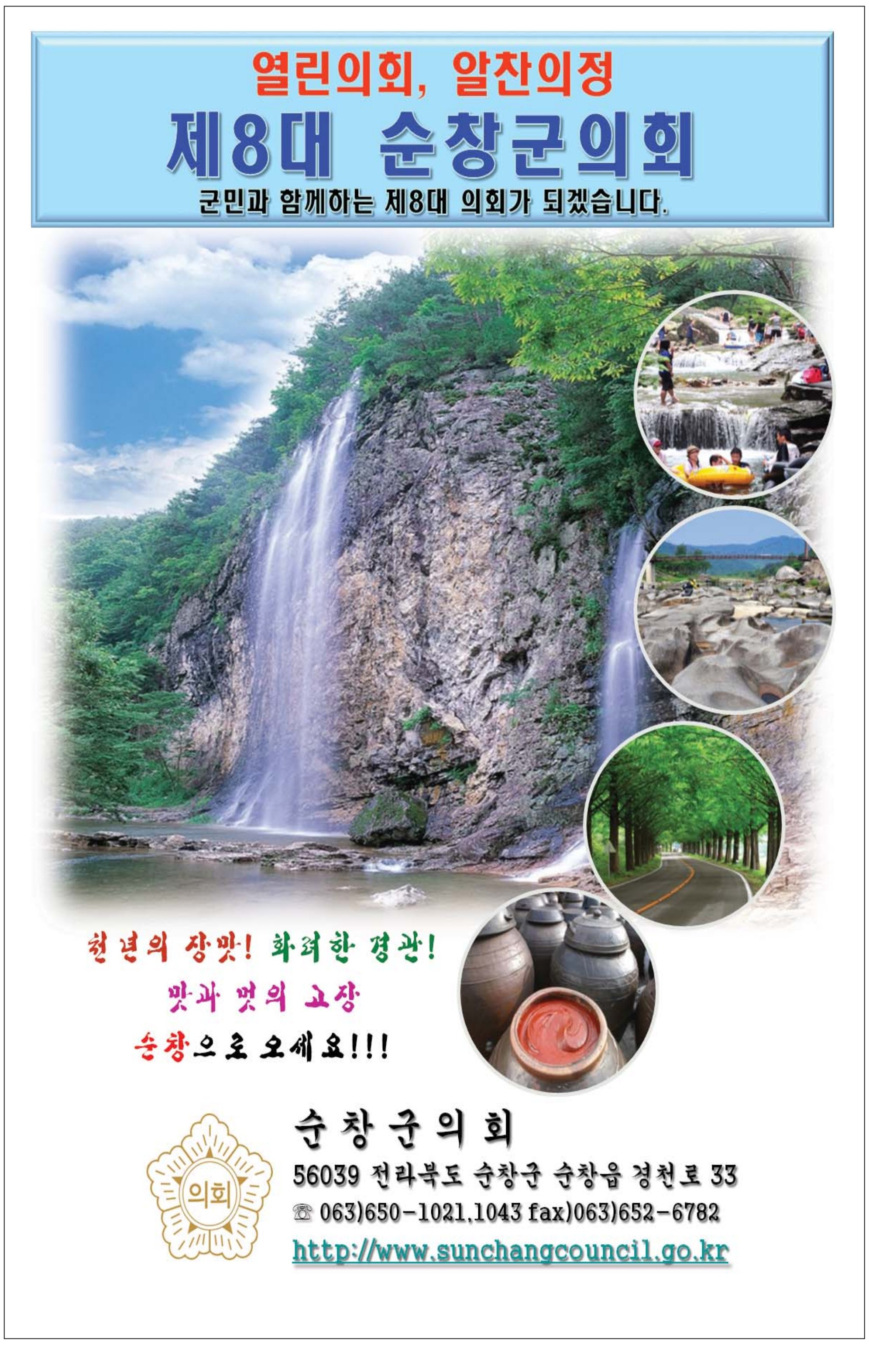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며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된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실업교육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렸는데 이스타항공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고의적으로 안했으며 노동부는 수백억이 넘는 임금체불을 방관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명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구체적 해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노동부나 국토부가 M&A(인수합병)가 성사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스타항공, 특히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교육 등 관계부처가 필요한 조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지원함으로서 노동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한 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 총리는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축산냄새 저감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급이형 저감제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황의탁 도의원 주재 '축산냄새 저감 정책 간담회'서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축산냄새 저감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황의탁 의원이 주재하고,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사료업계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축산냄새 저감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냄새연구소 조성백 소장의 급이용 축산냄새저감제 효과 검증 결과 발표에 이어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최연재 연구원의 '미생물 급이 등 악취저감사업 추진상황' 발표 그리고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황 의원은 "현재의 모든 축산냄새 저감방안은 냄새 발생물질인 분뇨처리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다"며 "사료에 냄새저감제를 첨가해 최대한 배출전에 1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후 발생 물질은 물리인 방법과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료 생산공정에서 냄새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구축과 중앙부처 법률 개정 건의 등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의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연구에 따르면 냄새저감제(미생물)를 사용한 양돈농가의 경우 냄새물질 최소 30% 저감 및 생산성 3% 향상, 농가수익 2.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

김철수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철수 의원은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 제37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감성 유지 중요'

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의원 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통한 성인지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명륜 젠더교육 전문가그룹 청어람 대표는 '궁금한 이야기 Y, 모두를 위한 How'를 주제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성희롱과 성폭력 처벌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강의에서 "성희롱은 조직의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 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며 "존중과 소통이 배어있는 조직문화가 자리를 잡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지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은 물론 사무처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4일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도의회 교육위, 의정발전 자문위원 6명 위촉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24일 교육 분야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이뤄졌다.

위촉된 위원은 △고석주(군장대학교 교수) △김기용(월드미션대학교 겸임교수) △김용군(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희(전 이리서초등학교 교장) △서유석(호원대학교 부총장)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등 6명이며, 이들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자문위원 임기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이며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과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